

# 돼지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돼지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자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돼지고기 수입을 재개해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돼지고기 수입재개는 절대 반대한다.

— 돼지고기 수입은 근본적인 물가안정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최근 일시적으로 상승한 돼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을 재개하는 것은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물가안정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돼지고기 수입재개를 절대 반대한다.

— 돼지고기수입은 국내돼지사육기반을 붕괴시켜 영원한 수입국으로 전락시킬 뿐이다.

정부가 작년에 돼지가격의 폭락으로 40%의 양돈농가가 빚을 저 도산할 때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최근 돼지값이 상승하자 물가안정을 이유로 수입을 하겠다는 발상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돼지고기 수입재개는 결국 국내 돼지사육기반을 붕괴시켜 영원한 돼지고기 수입국으로 전락시킬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 ◆정부는 수입재개에 앞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라.

현재 양돈농가들은 UR협상 진행에 따른 수입개방압력과 축산분뇨단속, 인력난 등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돼지고기 수입을 재개함으로써 국내 양돈생산기반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돼지고기 수입재개에 앞서 돼지생산비를 낮출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배합사료 등 축산기자재에 대한 관세·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라.
- 정부는 축사자동화 시설자금, 축산분뇨 처리자금 등을 보조 또는 장기저리로 대폭 지원하라.
- 정부는 돼지고기의 자급도를 제시하고, 이에 맞는 전업양돈농가의 육성과 지원을 대폭 강화하라.
- 정부는 돼지고기의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 하라.
- 정부는 말로는 축산발전을 외치고 한편으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영세양축가를 무허가건물, 분뇨처리 문제를 들어 무차별 구속함으로써 양축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 ◆양돈농가들은 물가안정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최근의 돼지값 상승은 예년에 없던 폭서로 인해 돼지발육이 정체됨으로써 출하량이 감소한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무더위가 물러가는 9월부터는 돼지의 정상발육으로 출하량이 증가함으로써 돼지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전국의 양돈농가들은 추석성수기를 앞두고 사양관리에 힘쓰면서 조기출하와 출하를 독려해서 돼지고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990년 8월 28일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

1986년 9월 우루과이 라운드가 공식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는 UR협상이 우리나라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도 없이, 일시적인 무역흑자를 이유로 1988년에 IMF8조국에 가입하였고, 1989년 10월에는 GATT 18조 B항(BOP)으로부터 졸업하여 11조국이 됨으로써 형식상 준선진국이 되어 OECD제국과 흡사한 선진국 대접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는 1997년 7월 1일까지 모든 농축산물을 수입개방하여야 하는 농축산업의 일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금년말까지 UR협상이 강대국들의 의도대로 통과되어 우리가 무방비로 외국 축산물 수입을 허용한다면, 우리 축산업은 그 생산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한 것이다.

이러한 불안감으로 인해 지난 1년간 40%의 양돈농가가 생업을 포기하였고, 이제 남아있는 농가들도 계속 양돈업을 영위하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우리는 「드주」초안에 의한 UR협상을 전면 거부하고 국내 농축산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UR협상은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 사항을 정부에 건의한다.

### ■UR농산물 협상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사항

1. 정부는 축산업을 국가중요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조속히 표명하라.
2. 정부는 돼지고기의 자급도를 제시하여 이에 맞는 과감한 전업 양축가의 육성과 지원을 대폭 강화하라.
3. 정부는 돼지고기의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고 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하라.
4. 정부는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투자지원을 하라.
5.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배합사료 등 축산기자재에 대한 관세,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축사자동화 시설자금, 분뇨처리 시설자금 등을 보조 또는 장기적으로 대폭 지원하라.
6. 정부는 말로는 축산발전을 외치며, 한편으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영세양축농가를 무허가건물, 분뇨처리문제를 들어 무차별 구속함으로써 양축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이같이 UR농산물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특히 금년 정기국회에서 배합사료의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가 추진하는 「배합사료 영세율 적용」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다.

1990년 8월 20일

사 단 법 인 대 한 양 돈 협 회